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 ‘제○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선정 기준 및 평가점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별 평가점수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청구인은 20○○. ○○. ○○. 위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후, 20○○. ○○. ○○.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 ○○. ○○. 위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기 생활공감정책(이하 생공감) 참여단 선정에 있어서 특정인들의 요구나 기관 관계자의 사견이 작용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근거자료에 의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 제○기 생공감 참여단 선정관련 1. 선정기준 및 평가점수 2. 추천인의 자격과 피추천인 선정기

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10개 군·구 중 ○개 군구가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구만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석을 ○○구만 달리 적용한다는 것인지 납득불가하다.

나. 기각 결정 사유인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가피하기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 될 경우 동종 또는 관련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한다는 것은 ○○구는 타구와 달리 명확한 선정기준이나 근거자료 없이 평가자 마음대로 선발하였다는 의미에 다름이 없고, 이는 계속 평가자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평가자의 개인적인 혹은 담당부서의 조직적인 불공정행위를 은폐하고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공감참여단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훼손과 균등한 기회박탈을 야기하는 바, ○○구의 평가점수 공개 기각 결정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제○기 생공감 선발에 대한 선정기준 및 평가점수에 관한 자료로, 우리 구는 인천시 「제○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계획」상 평가 기준에 따랐다.

나. 평가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험·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에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20○○. ○○. ○○. “평가점수”를 제외한 “선정기준”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우리 구의 응시자가 아니며, 우리 구에 응시한 제3자의 개별 평가점수를 요청한 것인데, 평가점수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응시자의 판

단, 능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 또는 내면영역이 포함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면 향후 누구든지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모집 점수를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다.

라. 개인별 평가점수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에 동종사무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 우리구를 제외한 다른 구가 공개하였다고 하여 우리 구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공개 결정은 우리구에 응시한 제3자의 정보와 평가자의 주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구의 제○기 생공감 참여단 선정관련 1. 선정기준 및 평가점수 2. 추천인의 자격과 피추천인의 선정기준” 자료 중 선정기준(평가표 및 배점), 추천인의 자격과 피추천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20○○. ○. ○. 부분공개시 이미 공개하였으며, 평가대상자 ○○인의 평가점수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항목별 평가점

수는 시험·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기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종 또는 관련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다. ○○구의 제○기 생공감 참여단 평가표에는 기본 항목 외 가점 항목에 ‘제○기 중 정책제안 우수자’, ‘제○기 참여단 중 오프라인 행동 적극 참여자’가, 감점 항목에 ‘제○기 참여단 중 활동실적 저조자’, ‘제○기 참여단 중 참여단 화합 훼손자’, ‘정당(선거) 관련 활동자’, ‘품위 손상 등 물의 야기자’가 있는데, 가점이나 감점을 받은 자는 항목별 1~2명에 불과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구의 제○기 생공감 참여단 평가대상자는 ○○명 남짓이고, 가점 및 감점 항목별로 해당자는 1~2명에 불과하여 개인 식별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평가표는 평가대상자 개개인의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 또는 내면영역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평가대상자의 인적사

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평가표가 공개될 경우 제3자인 평가대상자 개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평가표의 열람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또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사업무나 평가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4)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